

광주 문화기관 '미술도시 조성' 협력

12개 기관·대학·창작자 모임 '미술도시광주 민관협치회의' 출범

광주 문화 관련 기관과 대학, 창작자들의 모임 등 지역 문화기관들이 '미술도시 광주' 조성에 함께 힘을 모은다.

광주시는 23일 광주시립미술관 1층 로비에서 광주미술문화를 선도하는 12개 기관·단체·협회·학과와 100여 명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술도시광주 민관협치회의'를 출범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립미술관, 광주비엔날레, 광주문화재단, 미로아트센터, 소촌아트팩토리, 광주미술협, 광주민미협, 광주박물관미술관협회, 건강한미술 생태를 위한 화랑모임, 전남대 예술대학, 조선대 미술체육대학, 광주미술학회 등 광주의 미술인들이 모여 미술도시광주 실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미술도시광주 민관협치회의 발족은 지난 9일 준비모임에 이어 17일 1차 회의를 통해 미술도시광주를 향한 민관협치회의 발족과 상생 협약에 뜻을

모으면서 출발했다.

미술도시광주 민관협치회의는 매달 두 차례의 정례모임을 통해 미술도시광주를 위한 전략 수립과 사업방안, 실행계획을 세운 후 미술도시광주의 정책 비전 창출과 활성화에 매진할 계획이다.

'광주시립미술관'은 미술도시광주 정책을 추진하는 앞길을 기관으로서 미술과 함께 시민의 문화를 증진하는 정책 수립과 사업을 추진하는 구심점이 되기로 했다.

미술문화를 새롭게 도약시키고 문화예술전통과 광주민주정신을 문화적 가치로 승화시키기 위해 창설된 '광주비엔날레'는 세계와 광주를 아우르는 시각문화 발원지로서 꾸준히 도약해 동시대 미술, 미학적 담론과 철학을 새롭게 제시하는 미술도시의 선봉에 서기로 했다. '광주문화재단'은 예술가는 창작하면서 행복하고 시민은 문화와 함께 행복한 광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타 장르와도 상생

해 공진해나가기로 발표했다.

'미로아트센터'와 '소촌아트팩토리'는 미술로서 지역과 함께 문화적 가치를 더하는 중심 역할을 할 것을 약속하고, '광주미협'은 2500명 회원과 함께 미술인의 창작활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광주민미협'은 민주인권평화미술을 통해 광주 정신을 치유와 상상, 문화적 포용으로 펼쳐갈 포부를 펼쳤다.

'광주박물관미술관협회'는 전통과 미술문화를 선도해 국민의 문화와 예술 경험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상생을, '건강한 미술생태계를 위한 화랑모임'은 미술시장을 즐겁게 확대시키면서 유망작가 발굴 및 미술시장 활성화에 방점을 뒀다.

'전남대 예술대학'과 '조선대 미술체육대학'은 세계로 진출하는 창의적인 예술인을 양성하고 작가양성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광주미술관회'는 시민의 미술에 초저변 확대를 통해 풍요롭게 미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영록 전남지사(왼쪽에서 네 번째)를 비롯, 영·호남 시도지사들이 23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 17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손을 맞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지방 활성화 위해 복수 주소제 도입"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지방소멸 위기 극복 공동 대응

8명의 영·호남 시도지사들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복수 주소제 도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일주일의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전남 등 자연이 가까운 촌(村·전원)에서 머무는 '4도 3촌' 시대가 되면 지방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국가가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공동 성명서 채택했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 8명의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이날 울산에서 열린 '제 17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복수주소제도' 도입에 노력하기로 하는 등 공동성명서

를 채택했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전남도와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울산시, 전북도, 경북도, 경남도, 8개 시도지사가 참여한 협의체로, 이날 전북, 광주, 대구는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가 자립할 실질적 권한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8개의 공동 정책 협력과제와 영호남 광역철도망 및 광역도로망 구축을 공동성명서에 담았다.

공동 정책 협력과제는 ▲4도(都) 3촌(村) 생활양식을 반영한 복수주소제 도입 등 제도 개선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 공론화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확충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강화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 ▲출산장려금 국가 지원사업 전환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분권강화(소방인건비 국비지원·자치경찰제 이원화) ▲남해안권 비행자유구역 지정이다.

영호남광역철도망 구축은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서해안 고속철도건설 등 10개 노선이고, 영호남 광역도로망 구축은 남해-여수 해저터널·무주-대구(성주) 고속도로, 2개 노선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4도(都) 3촌(村) 등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주말 주택 활성화를 위해 독일과 같은 '복수주소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또 올해 전남에서 열리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제 104회 전국체육대회'를 비롯한 사·도별 주요행사 13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상호 지원을 약속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 용역업무 관리·운영 종합 개선

시의회 발주 문제점 제기에 종합 계획 마련... 이달말 매뉴얼 배포

광주시가 용역업무 관리와 운영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용역관리 내실화와 용역과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종합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추진체계를 정비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선안은 용역 ▲계획수립단계 ▲심의·수행단계 ▲평가·관리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계획 수립단계에서는 공무원의 행정경험과 외부 전문가 자문 등으로 자체수행 가능여부와 과업지시서의 구체성·명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심의·수행단계에서는 사전 실무 심사위원회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용역의 필요성·타당성·사업계획 적정성 등에 대해 심사하는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추진부서와 수행기관 간 협치를 통해 연구품질을 향상시키도록 했다.

평가·관리단계에서는 용역 완료 후 외부 전문가 의무참여 평가단을 구성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용역 결과물의 정책

방영 여부 등을 사후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필요한 의무위탁 용역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무원 연구모임'을 개선해 공무원이 직접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 추진에 따라 용역 운영 내실화 및 관리 책임성 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업무 수행 절차와 준수사항 등이 담긴 '용역 업무 관리·운영 매뉴얼'도 제작해 이달 말 관련 부서에 배포할 예정이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광주시가 공공기관 조직 진단 용역이 끝나기 두 달 전 공공기관 통합합을 발표한 점과 지산C 용역 중간 보고회가 있기 전 시장이 '진출임포는 폐쇄가 정확하다'고 밝힌 점을 들어 용역 발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유치'와 관련된 용역 결과도 총체적 부실로 지적되면서 광주시의회에서 동의안이 부결되기도 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 시민사회단체, 총선 앞 시민연대 출범

총선광주시민연대... 선거제 개혁 운동 전개

오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광주 시민단체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5개 시민 단체로 이뤄진 '2024 총선광주시민연대'는 23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정치개혁, 특히 선거 제도를 개혁해 심화되는 거대양당 기득권 독점정치를 타파하고 다당제를 활성화시켜 정치에 경쟁과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올바른 선거제도 개혁 촉구 및 실천 활동, 지역 정치독점 해소를 위한 실천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고, 시민사회와 제 정당 간 연석회의, 전국 시민사회단체와의 연석회의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출범 선언문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진

행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내용과 진행 방식 모두에서 거대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에 초점이 맞춰진 모습"이라며 "국회는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을 배제했고, 국민들이 가장 크게 비판하고 있는 세비 조정과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대한 논의는 주로 의제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지난 제21대 총선 당시 약속대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실시하고, 세비 총액 동결 또는 축소 등 국회의원 특권 폐지 전제하에 비례성과 정치 다양성 확대(여성, 청년, 장애인 등)를 위해 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남, 노후 방조제 개보수 전국 최다

전국 대상지 27곳 중 21곳 선정...올해 18곳 신규 착수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신규 착수 대상지로 총 27개 지구 중 전남에서 모두 21개 지구가 선정됐다. 올해 선정된 신규 착수 대상지는 국가관리 3개 지구, 지방관리 18개 지구다.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노후 방조제의 제방, 배수갑문 및 부속시설을 미리 보수·보강해 홍수, 태풍, 해안침식 등 자연재해를 따른 시설물 붕괴와 파손을 예방하고 바닷물 유입을 막아 농경지를 보호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현재 추진 중인 6개 시·군 35개 지구와 올해 신규 선정된 21개 지구에 국비와 지방비 1268억원을 들여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규 지구는 설계 착수 단계부터 전남도와 시·군, 한국농어촌공사가 협력해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에 대응하고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한 세부 설계를 연내 완료하고 2024년 상반기 착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윤재광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업 재해 예방과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낙후 농업 기반시설 개선, 보수·보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 조기 마무리를 위해 국고예산 추가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1998년부터 2022년까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 및 보수·보강이 필요한 방조제 936개 지구에 대해 1조2375억원을 투입해 개보수 사업을 추진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동행재활요양병원

DongHaeng Convalescent Hospital

“ 환자맞춤형 치료를 통하여 회복과 통증완화를 돕습니다. ”

일반
요양

중풍
재활

수술후
재활

면회공간

환우분의 만남의 장소를 병원 1층에 면회와 운동, 카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신체프로그램, 인지프로그램, 작업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내 생활 공유

환우분의 근황 및 일상을 카카오톡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동행재활요양병원은 『환자의 안전』과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입니다.

광주역 앞 (신안동 2-3)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26

062)720-2000

의료관광지원위원회 심의명 제190816-총-388919

의학·한의학 협진

의학·한의학 협진을 통해 침치료, 부항, 침약 등의 한방 치료를 제공하여 회복과 증상완화를 돕습니다.

질환에 맞는 치료 제공

중추신경계 치료와 근골격계 추나 치료, 통증치료를 통해 통증완화 및 기능회복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면회공간

다양한 프로그램

병원내 생활 공유



동행재활요양병원은 『환자의 안전』과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입니다.

광주역 앞 (신안동 2-3)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26

062)720-2000

의료관광지원위원회 심의명 제190816-총-388919